

식 순

P · R · O · G · R · A · M

- ▣ 일시: 2010. 5. 25(화) 10:00-12:30
- ▣ 장소: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
- ▣ 주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양대학교고령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09:30~10:00 등 록

10:00~10:20 개회식

개회사 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축 사 박현경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10:20~11:00 발표 1 서문희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저출산 대응을 위한 보육정책 개선방안”

발표 2 안현미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보육체계 개선: 서울시 ‘서울형 어린이집’을 토대로”

11:00~12:30 좌 장 김두섭 한양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토 론 김순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여성본부장

도미향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박차옥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사회권국장

백선희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양옥승 덕성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이연승 경성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가나다 순)

자유토론 및 폐회

차 례

C · O · N · T · E · N · T · S

▣ 저출산 대응을 위한 보육정책 개선방안

서문희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1

▣ 보육체계 개선: 서울시 '서울형 어린이집'을 토대로

안현미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35

1



저출산 대응을 위한 보육정책 개선방안

서 문 희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01

저출산 대응을 위한 보육정책 개선방안

서문희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1 들어가는 말

- 최근 수년간 우리나라는 보육료·교육비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자녀 양육비용 지원 확대 정책을 추진하였음. 이러한 정책에 힘입어 아동의 육아지원기관 이용은 꾸준히 증가하였고, 자녀양육부담이 줄었다고 느끼는 부모의 수도 증가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수준은 오르지 않고 여성의 취업도 크게 증가하지 않아 일부에서는 부모 양육비용 지원정책의 효과가 없음을 거론하기도 함.
- 보육정책은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통한 저출산 정책의 필수적 조건임.
 - 또한 보육정책은 출산한 자녀를 미래 인적 자원 개발이라는 주요한 기능을 함.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보육부분은 보육료·교육비 지원 확대, 양육수당 지원 확대, 육아지원시설 확충, 육아지원기관 서비스 개선,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다양화, 초등학생 방과후 지원 확대, 가족 지역 네트워크 구축 및 가족친화 지역환경 조성 등의 7개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음.

2 보육정책 현황과 개선방안

1) 보육 교육료 지원 확대

가. 추진 현황

- 비용 지원 현황은 다음과 같음.
 - ① 0~4세 아동 보육교육비 지원
 -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함과 동시에 부모의 육아부담을 완화하고 유아교육기회를 확대하여 유아교육의 양극화 해소에 기

여 하고자 하는 목적

- 소득하위 70%수준 이하 가구 자녀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0~만4세 아동에 대해 연령별·소득수준별 차등적인 보육료 지원

〈표 1〉 차등보육료 지원대상 및 지원율

구 분	영유아 100	영유아 60	영유아 30	일반아동
지원비율	기준보육료 100% + 기본보육료*	기준보육료 60% + 기본보육료	기준보육료 30% + 기본보육료	기본보육료만 지원
지원대상 소득기준	소득하위 50% 이하	소득하위 50%초과 ~ 소득하위 60%	소득하위 60%초과 ~ 소득하위 70%	소득하위 70% 초과

주) 기본보육료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민간보육시설 이용 영아(0~2세)에 추가 지원

자료) 중앙부처합동 (2010)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10년도 중앙부처 시행계획”

-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소득하위 70%이하의 영유아 가구에 대해 만3~4세 학비를 소득수준별로 차등 지원하고 있음 (공립 57천원, 사립 191천원 기준)
 - 유치원아 중 소득하위 70%수준 이하 가구 자녀에 대하여 단가 현실화하기 위하여 국공립은 경우 월 3만원, 사립은 월 5만원을 지원함.
- 지원 실적으로 2009년 현재 차등보육료는 총 798천명(전액지원: 460천명, 일부지원: 188천명, 기본보육료만 지원 : 150천명)에 대해 지원하였으며(11월말 기준), 차등교육비는 총 139,299명에게 지원하였음(3/4분기 실적 기준).

② 만5세아 무상 보육교육비 지원

- 보육시설 및 유치원을 이용하는 만5세 아동에 대해 보육·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학업준비를 지원하고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을 경감함과 동시에 아동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학부모의 육아부담 부담을 경감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소득하위 70%이하 가구의 만5세 아동에 대해 무상 보육 (기준 보육료 100% 지원)
 -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소득하위 70%이하 가구의 만5세아에 대해 학비 균등 지원(공립 57천원, 사립 172천원 기준)
- 2009년 11월말 기준으로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인원은 총 108천명이며, 만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인원은 총 119,117명(3/4분기 실적 기준)

③ 두자녀 이상 보육교육비 지원

- 두자녀 이상이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동시에 이용하는 저소득층 가정에 대해 두 번째 이상 자녀의 보육비, 교육비를 지원하여 다자녀가구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부모의 경제활동 유도를
- 2009년까지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소득하위 50%초과~70%이하 가구의 만 0~4세 둘째 이상 아동에 지원
 - 소득 하위 50~60% 둘째 자녀는 기준 보육료 100% 지원, 소득 60~70%는 기준 보육료 80%를 지원 받음.

〈표 2〉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대상 및 지원율 (2009, 2010년)

구 분	두자녀 60	두자녀 30(2009)	두자녀 30(2010)
지원 비율	기준보육료 40% *즉 아동은 기준보육료 100%를 지원받음(차등보육료60%+두자녀 보육료 40%)	기준보육료 50% *즉 아동은 기준보육료 80%를 지원받음(차등보육료30%+두자녀 보육료 50%)	기준보육료 70% *즉 아동은 기준보육료 100%를 지원받음(차등보육료30%+두자녀 보육료 70%)
지원대상 소득기준	소득하위 50%~60%	소득하위 60%~70%	소득하위 60%~70%

자료) 중앙부처합동 (2010)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10년도 중앙부처 시행계획”

- 두자녀 이상 교육비 지원은 정부지원단가의 50%까지 추가로 지원하고 있음 (공립 28천원, 사립 95천원 까지)
- 2009년도 지원 실적으로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은 총 60천명에게 지원하였으며(11월말 기준 통계), 두자녀 이상 교육비 지원은 총 13,871명에게 지원하였음(3/4분기 실적 기준).
- 2010년부터 ‘두자녀이상보육료’ 지원 대상을 소득하위 70%이하 가구의 둘째 아에게 차등 보육료 지원을 포함하여 기준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기로 함.

④ 농업인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 농어업인의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젊은 층의 농어촌 거주를 유도하기 위해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지소유규모 5ha미만 농어가 농어업인의 취학전 자녀 (농어가의 농어업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은 지원에서 제외함)에게 양육비의 일부를 지원

- 보육·교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해 연령별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70%를 지원하며, 보육·교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 연령별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35%를 양육 수당으로 지원함.
- 2009년에 월평균 53천명의 농어업인의 자녀에 대하여 양육 비용을 지원하였음
- 2010년도에는 농어업 외 소득 요건을 연간 3500만원 미만에서 3700만원 미만으로 완화

⑤ 장애 영유아 무상 보육·교육비 지원

- 부모의 소득수준 및 장애아의 장애등급과 상관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12세 이하의 장애아 및 유치원을 이용하는 만3~5세의 특수교육대상 장애유아를 대상으로 보육료, 교육비를 지원
 - 장애아 무상교육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국고 일반 회계 및 지방비 대응 투자(50%) 사업으로 추진하였고, 2008년도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으로 장애유아 의무 교육과 무상 교육비 지원 사업을 지방 사업으로 이양
- 2009년 현재 장애아 무상 보육비를 총 15천명에게 지원하였으며 (11월말 기준 통계), 또한 만 3세~만5세로 유치원 과정에 취원 중인 특수교육 대상 유아 2,233명에게 교육비를 지원하였음.

⑥ 맞벌이 가구 보육·교육비 지원 강화

- 2010년에 새롭게 도입된 정책으로서 맞벌이 가구의 경우 보육료 지원을 위한 소득인정액 산정시 일부 소득을 차감하여 산정
- 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을 25% 차감할 때 소득분위가 하위로 이동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차감 전 지원 단가와 소득 차감 후 지원단가의 차액을 지원할 계획임.

나. 문제점

- 정부의 유아교육비나 보육료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소득 대비 보육·교육비 지출은 평균 7.7%이며, 이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가구 비율이 62.3%에 달함.

- 소득 대비 보육·교육비 지출 비율은 (04년)8.3%→(09년)7.7%로 감소하였으나,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가구 비율이 58.1%→62.3%로 증가(육아정책연구소, '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 보육시설은 민간과 국공립보육시설 간의 비용 차이, 특별활동 비용 등 기타 경비가 증가하여 전액 지원 대상자도 실제 부담을 느끼고 있음.
- 유치원의 경우도 종일반비 등 수혜성 경비로 학부모가 실제 부담하는 유아학비 지속적으로 증가
- 2010년부터 맞벌이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개선하여 맞벌이 가구의 경우 두 사람 소득 중 낮은 소득의 25%를 공제하나, 홀벌이일 때보다 낮은 수준의 보육료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
- 월 소득 200~399만원 구간이 교육비 불만족도가 가장 높음('08, 육아정책개발센터).

다. 정책 추진 방안

- 0~4세 보육료·교육비 전액 지원 대상 확대
 - 4세이하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중산층까지 확대

〈표 3〉 0~4세 아동 무상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방안 (2010~2012)

소득기준	2010년	2011년	2012년
소득하위 50% 이하	기준보육료 100% + 기본보육료*	기준보육료 100% + 기본보육료*	기준보육료 100% + 기본보육료*
소득하위50%초과 ~소득하위 60%	기준보육료 60% + 기본보육료	기준보육료 100% + 기본보육료	기준보육료 100% + 기본보육료*
소득하위60%초과 ~ 소득하위 70%	기준보육료 30% + 기본보육료	기준보육료 60% + 기본보육료	기준보육료 100% + 기본보육료*
소득하위 70%초과 ~ 소득하위 80%	기본보육료만 지원	기준보육료 60% + 기본보육료	기준보육료 100% + 기본보육료*

주) 기본보육료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민간보육시설 이용 영아(0~2세)에 추가 지원

-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확대를 소득기준에 의한 확대에서 다자녀가구, 맞벌이 가구 등 실질적인 보육수요계층이나 저출산대책 차원에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

- 다자녀가구, 맞벌이가구 등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12년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의 80%까지 전액지원
- 만5세아 보육료·교육비 전액지원 대상 확대
 - 만5세 아동에 대한 보육료 무상 지원을 연차별로 확대하여 2013년에는 전체 만5세아를 대상으로 보육료 무상 지원
 - 취학준비 등 육아지원시설 이용욕구가 높은 만5세 아동에 대한 지원 사항을 모든 만 5세아로 확대

〈표 4〉 만5세아 무상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방안 (2010~2013년)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지원비율	기준보육료 100%	기준보육료 100%	기준보육료 100%	기준보육료 100%
지원대상 소득기준	소득하위 70%이하	소득하위 80%이하	소득하위 90%이하	전체 만5세아

- 두자녀 이상 보육교육비 전액 지원 대상 확대
 - 2010년 둘째아 이상 전액지원 대상을 현행 소득하위 60%이하에서 소득하위 70%이하로 확대
 - 전액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13년 전체 0~4세 둘째아를 대상으로 전액 지원

〈표 5〉 두자녀 이상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방안 (2010~2013년)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지원비율	기준보육료 100%	기준보육료 100%	기준보육료 100%	기준보육료 100%
지원대상 소득기준	소득하위 70%이하	소득하위 80%이하	소득하위 90%이하	전체 0~4세 둘째아

- 농업인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사업 지속 추진
 - 일정규모(5ha) 이하의 농지 소유 농업인 자녀에 대한 보육·교육비 지원 지속
 -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를 위하여 농어촌 지역 보육시설 미이용 자녀 양육비 지원과 병행하여 추진
- 만 3세 미만 장애영아 무상교육 및 장애유아 유치원 의무교육 단계적 실시
 - 의무교육 : 만 5세 이상('10) → 만 4세 이상('11) → 만 3세 이상('12)

- 육아지원시설 이용 장애아에게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교육비 전액 지원
- 맞벌이 가구 보육교육비 지원 강화
- 맞벌이 부부 소득 산정시 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의 일부만을 소득인정액에 합산함으로써 보육료 지원 확대
- 2010년 부부 중 낮은 소득의 25%를 감액에서 향후 적용비율 점차 확대

2) 양육 수당 지원 확대

가. 추진 현황

- 2009년 7월부터 차상위 이하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0~1세 11만명에 대하여 월 10만원 양육 수당 지원

나. 문제점

- 보육시설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양육비 지원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부모의 경제적 부담 및 시설 이용 아동과의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지 않음
- 영아의 경우 보육시설 대신 조부모·친인척 등 가정양육 비율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큰 비중
 - 영아를 둔 취업여성의 경우 조부모·친인척 양육이 (04년)70.9% → (09년)64.8%, 가사대리인 (04년)9.4% → (09년)6.6%로 다소 감소 (전국보육실태조사, 2004, 2009)
 -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자녀양육비용은 영아 62.9만원, 유아 74.8만원(보사연, 2006)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영아기본보조금, 차등보육료를 지원하는 반면,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지원은 취약하여 부모 양육비 부담이 큰 상태
 - 보육료 지원의 경우 소득 하위 70%까지 지원하고 있어 향후 대상자 확대 및 양육 수당 지원금의 현실화가 요청됨.
 - 가정 내 양육을 선호하는 만 3세 이하 영아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
 - 월 10만원은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으로 급여액수 인상이 필요

다. 정책 추진 방향

- 보육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 수당 대상자 확대 및 지원 금액 현실화
 - 보육시설·유치원 미이용 영유아에 대해 소득 하위 80%('12)까지 단계적 지급 확대
 - 2009년 만0~1세 까지 지급대상인 것을 2012년까지 만5세까지 확대
 - 만0~1세('09)→만0~3세('11)→만0~5세('12)
 - 유아에 대한 양육수당은 기관 이용 기회 제한으로 아동발달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양육 수당 지원 금액 현실화하여 2009년 월 10만원에서 단계적 인상 추진
 - 영아(0~2세)의 경우 보육시설 대신 조부모, 친인척 등에 의한 양육비중이 높은 실정임을 감안하여 시설이용 아동에 상응한 지원 방안 마련
- 양육 수당과 보육료 지원의 통합적 관리 시스템 구축
 - 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 간의 대상이 중복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보육료 지원과 유사한 전달체계 방식을 이용하여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양육수당 또는 보육시설 이용료 중 선택하도록 하고, 양육수당은 현금 지원을 원칙적으로 하되 향후 보육시설 이용료와 양육수당을 모두 전자바우처로 지원하는 방안 검토
- 아동 수당 도입 검토
 - 현재 보육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인 양육 수당 제도를 발전시켜 향후 아동 수당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아동의 인적자원 육성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을 공유하는 공시에 자녀 양육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공유하여 자녀 양육가정이 빈곤해 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음.
 -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부담으로 인하여 출산을 꺼려하는 가족들의 출산을 장려한다는 측면에서 도입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음.
 - 아동 수당 지원 방안
 - (아동연령) 3세→6세→9세→12세 등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지급
 - ※ 일본의 사례로서 초창기 아동복지 차원에서 지급하였으나, 1990년대 출산

장려책으로 전환

- (출생 순위) 초기에는 셋째아 이상에게 우선 지급하고, 향후 점진적으로 둘째아, 첫째아로 확대
 - (소득기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모두 지원
- ※ 지자체의 출산장려금, 출산시 소득공제, 6세이하 자녀에 대한 추가공제, EITC 등과의 중복성 조정 필요

3) 육아지원시설 확충을 통한 보육수요 충족

가. 추진 현황

- 국공립보육시설 및 통합육아지원시설 설치 저조
 - 2008년도 공공기관 리모델링 8개소, 민간 매입 3개소, 공동주택 리모델링 46개소 등 총 102개소의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 2009년도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84개소 (신축 39개소, 공동주택리모델링 45개소)
 - 2008년도에 학교 유휴교실을 활용하여 국공립보육시설 2개소 설치
 - 유휴교실 부족, 보육시설 내 아동안전·영양에 대한 책임소재 모호, 수익성 이유로 학교 BTL사업에 민간자본이 진입을 기피하였기 때문에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나. 문제점

-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수요에 비해 시설의 접근성과 수용능력이 부족
 -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부모의 만족도가 높으나 이용 아동수는 전체 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10.9%에 불과
 - 보육시설만족도(5점 만점) : 국공립 보육시설(3.73) > 민간 보육시설(3.61) ('09 전국보육실태조사)
 - 특히 중소도시 이하 취약지역의 국공립시설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저조
 - 국공립 보육시설 비율('08년 보육통계) : 대도시 7.1%, 중소도시 이하 4.4%
 - 0~2세 영아의 시설 이용 비중이 낮아 향후 추가수요 발생 시 대응 곤란
- 국공립유치원의 수용능력 부족
 - 국공립유치원은 '08. 12월 현재 국립유치원 3개원, 공립유치원 4,480개원으로

전체 유치원 8,344개원 중 각각 0.04%, 53.69%로 과반수를 차지하지만, 학급수를 보면 국공립 학급수가 6,789개로 전체 학급수 24,567개 중 27.63%에 불과하고, 공사립간 취원아 비율('08)은 공립 22.2%, 사립 77.8%임.

- 도시지역 공립유치원의 원아 분담율은 12.9%에 불과
- 유치원만족도(5점 만점) : 국공립 유치원(3.80) > 민간 유치원(3.69)
(‘09 전국보육실태조사)
- 공립기관을 선호하는 주된 이유는 비용과 신뢰로 파악
 - 민간보육시설이나 사립유치원은 인건비 등 재정 지원 미비로 이용부모의 비용 부담이 높음에 따라 만족도가 낮고 형평성 문제 제기
 - 유치원 비용 만족도(5점 만점): 공립 유치원(4.21) > 사립 유치원(2.97)(육아정책연구소, 09년 보육실태조사)

다. 향후 추진 방안

- 국공립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
 -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설치
 - 신축·기존시설 활용 등 다양한 확충방식 추진
 - 민간시설 매입, 복지관 등 공공건물 신축 시 복합화, 폐 동사무소 등 공공건물 유휴공간 활용, 공동주택(국민임대주택) 의무설치 보육시설 리모델링 등
- 공립유치원 확충 및 적정규모 육성
 - 신도시, 재개발지구 등 인구유입지역을 중심으로 공립과 사립유치원간에 균형 있는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유도
 - 지역 교육청별 유치원 수용계획(3년 단위) 수립시 공사립유치원의 참여 기회 보장
 - ‘지역 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협의회’ 등 활용
 - 초등학교 신설시 병설유치원 설치 권장
 - 공립단설유치원 신설비를 보통교부금의 기준재정수요에 반영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개정
- 소규모보육시설 확충
 - 영유아의 숫자가 적어 보육시설 설치가 어려운 지역의 소규모 보육시설 확대

- 를 위하여 지역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지방노동관서, 초등학교 등 공공기관의 유희시설을 리모델링
-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농어촌의 특성을 반영한 시설 설치·운영 규제 완화 병행 추진
 - '09) 10개소 → '10) 10개소 → '11) 20개소 → '12) 30개소
- 통합적 육아지원시설 설치 및 지원
 - 학생감소로 발생한 학교 유희시설을 병설유치원 및 영아전담 보육시설로 활용
 - 영아전담 보육시설은 병설유치원이 설치된 학교에 한하되, 0~2세 보육시설과 3~5세 유치원의 연계 운영 모형 발전
- 농산어촌 보육·유아교육 여건 개선
 - 농산어촌 지역(읍·면 지역) 공립 병설유치원을 적정규모로 통합운영하고, 지리적 여건상 통합이 어려운 지역은 거점유치원과 연계 강화
 - '12년까지 322개 병설유치원을 112개로 통합운영(210개 폐원)
 - 농산어촌 지역 소규모 보육시설 설치 이외에 공립 이동식 보육시설 운영, 교사 파견 등으로 영유아 보육기회 확대

4) 육아지원기관 서비스 개선

가. 추진 현황

-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실시
 - 보육서비스에 대한 효과적인 질적 수준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부모에게 보육시설에 관한 정보제공으로 시설 선택권 부여
 - 2009년 12월 현재 평가인증 참여 신청수는 29,084건으로 보육시설수의 86.8%이고, 2009년 4기까지 인증시설수는 20,255개소로 보육시설의 60.5%를 기록
 - 참여신청, 자체점검, 현장관찰, 인증심의 4단계 과정을 거쳐 진행이 되며 사후관리가 이어짐.
- 보육서비스 제공자의 전문성 제고
 - 보육교사, 보육시설장에 대한 국가자격증제도 시행
 - 보육인력의 전문성 제고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영유아에게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목적
 - 자격증을 보육교사 481,854건, 보육시설장 116,813건을 발행함

- 보육인력 보수교육에 표분보육과정, 평가인증을 필수교과목으로 편성하여 직무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
- 유치원 평가제
 - 유치원에 대한 평가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저렴하고 질 높은 사립유치원을 육성하여 유아교육 서비스의 질 제고
 - 유치원 운영 실태 진단과 개선 방안 모색을 통해 유치원 운영의 효율성과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 교육과정영역, 교육환경영역, 건강안전영역, 운영관리영역, 자율사업영역, 종일제 운영영역 평가
 - 5년간 추진방향
 - 유치원 1주기 평가 수행: 2010년: 전체 3,880개 사립유치원에 대한 평가 시행
 - 유치원 2주기 평가: 2011년~2013년
 - 유치원 3주기 평가: 2014년~2016년
- 민간시설 기본 보조금 지원
 - 2008년도에 민간시설 영아를 대상으로 기본보조금(0세 292천원, 1세 134천원, 2세 86천원)을 지원
 - 결과, 민간보육시설 영아보육료 고시 상한가가 국공립보육료와 동일해짐

나. 문제점

- 보육시설 평가인증
 - 평가지표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개선 필요
 - 시설의 과도한 서류 작성 부담 개선
 - 인증제를 통과하지 못한 시설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
 - 평가인증 참여 활성화를 위해 보육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연계 등 다양한 인센티브 모색 필요
 - 인증시설의 서비스 질 유지를 위한 체계적 지원 및 사후관리 필요
- 보육서비스 제공자의 현장전문성 부족과 열악한 근로환경
 - 보육교사, 보육시설장에 대한 국가자격증제도 시행하고 있으나 예비보육교사의 현장전문성 강화 필요
 - 보육인력 보수교육이 형식주의적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보육교사의 질 향상에

- 별다른 효과성이 없다고 지적됨..
- 종일제 보육시설 운영에 따른 교사의 법정 근무시간 초과 및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인해 질 좋은 서비스 제공 어려움
 - 유치원 평가제 사후관리 및 정보제공 미흡
 - 우수사례 유치원 홍보 및 정보제공 활성화 방안 필요
 - 평가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및 인센티브 부재
 - 유치원 정보에 대한 학부모의 접근성 제한
 - 정부지원 기관 운영의 투명성, 책무성 확보 장치 부재
 - 대부분의 사립유치원이 비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정보 공개 및 재무회계 규칙 등 최소한의 투명성 확보 장치 미비
 - 평가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및 인센티브 부재
 - 종일제 보육시설 운영의 비효율 초래
 - 보육시설은 평일 12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공립 보육시설은 종일제로 운영됨.
 - 정부가 제시하는 보육료 상한선이나 정부 지원 단가는 모두 종일제 기준으로 적용됨.
 - 종일제 기준으로 획일화되어 적용되어지는 표준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등은 다양한 이용시간을 고려하지 않아 비효율 초래
 - 취업모 자녀의 경우 평균 8시간 38분, 미취업모 자녀의 경우 6시간 57분 이용하며, 보육시설 이용아동의 21.6%가 6시간 이내를 이용하고, 19.3%가 오후 2~3시에 하원하고 있음(육아정책연구소,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 사립유치원 기본 보조금 지원 미실시
 - 사립 유치원 유아 기본 보조금 지원은 시범사업 실시('06.9~'08.2)에도 불구하고, 예산 미편성으로 실시되지 못함.
 -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이유는 사업대상을 유치원으로 한정 시 유아의 유치원 쏠림현상으로 보육시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으로 지적됨.
 - 이와 관련,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수요자의 선택권 보장, 기관 간 경쟁을 통한 교육의 질 개선)으로 정책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됨.

다. 향후 추진 방안

-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개선
 - 평가인증 2차주기('10년~'13년) 제도 마련 시 평가 지표 고도화
 - 인증 심의자료에 지자체 평가 항목을 확대, 지자체의 인가 및 지도점검 연계
 - 평가인증 결과를 활용한 등급화 등 소비자 선택 기준 제공. 인증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 제공으로 부모의 보육시설 선택 시 이용 등 활용도 제고 (보육정보 포털 시스템과 연계)
 - 인증시설의 서비스 질 유지를 위한 체계적 지원 및 시설 사후관리 강화
 - 기본보조금, 보육서비스 이용권 등 재정 지원과 연계
- 보육서비스 제공자의 전문성 제고 (신규)
 - 표준보수교육과정 시행으로 보육종사자 보수교육 내실화
 - 양성 및 보수교육과정 평가 체계 마련 및 평가제 도입
 - 보육실습 기준 마련으로 예비보육교사의 현장전문성 강화
 - 환경변화를 감안하여 보육인력 자격 기준 및 체계 정비
 - 대체교사 지원사업 활성화 및 보육교사의 근로 환경 개선
- 유치원 평가제 확대
 - 2011년부터 시작되는 유치원 평가 2차 주기 평가지표 개선
 - 우수사례유치원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 사립유치원은 평가 결과와 교사인건비 지원의 연계 방안 고려
- 보육·교육 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
 - 공립·법인, 일정규모 이상 민간 시설에 『보육시설운영위원회』설치 의무화 및
 - 지자체별 『부모 모니터링단』 구성 등을 통해 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
 - 유치원 정보공시제도, 재무회계 규칙 및 유치원운영위원회 도입 등으로 투명성을 확보
- 사립유치원에 대한 바우처 지원(유아학비)과 기관 지원 병행
 - 유치원 평가, 교원능력개발평가 수행 및 유치원 종합정보시스템 참여 등 책무성 강화
 - 지원요건을 갖춘 사립유치원의 신청에 따라, 지역교육청에서 대상기준 충족 여부 등을 확인 후 지원여부 결정

- 보육시설 운영 및 이용의 합리성 제고(신규)
 - 종일제 보육시설 운영에 따른 교사의 법정 근무시간 초과 해소 방안
 - 불필요한 아동의 장시간 보육으로 인한 비효율 해소 방안 제시
 - 표준보육과정과 연계된 오후 프로그램 및 반 운영 방안 마련
 - 표준 비용 및 지원단가 차등 적용 및 적용시간 다양화
 - 이용시간 유형을 다양화(반일제, 시간연장제, 종일제 등)하여 이용시간별로 표준 비용 및 지원단가 차등 적용

5) 수요자 중심의 보육 서비스 다양화

가. 추진 현황

- 시간연장형 보육 서비스 확대
 - 취업부모의 일과 육아 양립을 위해 사회기반을 조성하고 저녁 늦게까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맞벌이 부부 등의 보육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맞벌이 부부 등의 육아부담 완화 위해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 2009. 6월 현재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은 4,681개소이며, 전년(4,187개소) 대비 약 12% 증가
 - 맞벌이 부부 등의 육아부담 완화를 위해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5,000명)
 - 야간보육아동에 대한 시간연장 보육료 지원
 - 야간보육(19:30~익일07:30)시 07:30이후 시간연장 보육 허용하여 부모의 편익성 제고(정원 범위내, 60시간 한도내)
 - * 정원범위내로 종일보육 아동의 보육활동에 대한 피해 최소화
 - * 60시간 한도는 현행 종일보육의 시간연장한도와 동일
 - 2010년 맞벌이 부부 등의 육아부담 완화 위해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확대 계획
 - 2009년 5,000명(316억원) 지원 → 2010년 6,000명(408억원) 지원
 - 민간 시간연장 지정보육시설의 인건비 지원 확대('09년 1명 → '10년 2명)
 -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에 대해서도 보육시설에서 시간연장 보육서비스 제공
 - 미취학 아동을 둔 부모의 12.5%가 상시, 23.6%는 주당 1-2번 시간연장형 보육이 필요하다고 인식

- 대형시설은 큰 건물에 교사 1인이 한 개 반만을 운영하는데 따른 안정감과 안전 등 보육의 어려움과 시설장의 책임문제 등으로 시간연장보육 운영 기피
- 시간연장 보육교사의 인건비 지원을 통한 시간연장형 보육 활성화, 맞벌이부부 등의 보육부담 경감, 취업부모의 일-육아 양립을 위한 사회기반 조성 강화
- 종일제 운영 유치원 확대
 - 맞벌이 부모들의 육아부담 경감 및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종일반 운영 확대 및 내실화 추진
 - 종일반 운영 유치원을 95%까지 확대 추진(총 유치원 8,202개원 중 7,835개원이 종일제 운영), 2010년 97% 까지 확대 추진
 - ※ 종일제 운영 전반에 대한 만족도: 증가 '08년 85.8% , '09년도 90.3%
 - 2010년 방학중 종일제 이용 유아가 소수일 경우 인근 공사립유치원 5~7개 유치원과 연계하여 중심유치원 운영
 - 2010년 「야간 돌봄 전담유치원」 운영
 - ※ 「유치원 종일제 운영 내실화 방안」 마련('09.12), 「야간 돌봄 전담유치원 운영 방안」 등 마련('09.12)
 - 맞벌이 유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21시까지 운영이 필요한 경우, 인근 공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통합하여 「야간 돌봄 전담유치원」 운영
 - 이용 유아수가 많은 사립유치원을 「야간 돌봄 전담유치원」 으로 지정
 - 종일반 운영의 단계적 확대, 종일제 보조인력(3세대 하모니) 지원
 - 종일제 교사 업무경감을 위해 종일제 보조인력 지원: 274억원, 4,530명 지원
 -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한 시설환경개선비 지원
 - 냉·난방시설, 보안시설, 급간식비 등 지원: 200억원 2,855개원 지원
-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
 - 양육자의 야근·출장·질병 등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집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가족의 아동양육 부담 경감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0세(3개월이상)~만 12세 아동이 있는 이용 희망가정에 월 80시간(연 480시간 이내) 아이돌보미 파견

〈표 6〉 아이돌보미 지원 기준 및 이용 요금

유형	이용요금(1시간당)			'10년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용단가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5,000원	4,000원	1,000원	50% 이하 (이용요금 80% 지원)
나형	5,000원	1,000원	4,000원	50%~100% (이용요금 20% 지원)
다형	5,000원	전액 자부담으로 이용시간 제한 없음		100% 이상 가정

- 서비스 내용: 서비스 수요유형에 따라 아동 양육 중심의 양육 돌봄 서비스와 취학아동 학습 지원을 위한 학습 돌봄 서비스 제공
 - 양육 돌보미: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보육시설 등하원, 놀이 활동 등
 - 학습 돌보미: 숙제점검, 예·복습 관리, 준비물 준비 등 아동 학습 보조 등
- 사업지역 전국 확대를 통한 접근성 강화 및 서비스 제공 영역의 다양화
 - 2008년 65개 지역에서 '09년 232개 시·군·구로 사업지역 전국 확대
 - 초등학교 저학년 학습 지원을 위한 학습 돌보미 서비스, 주말심야 연계 활성화를 위한 '긴급 돌보미제' 신규 실시
- 2010년 영아 정기 돌봄 서비스: 보육료 지원 소득하위 50% 이하, 0세 아동을 양육하는 맞벌이·한부모 가정에 정기 돌봄 서비스(하루 최대 11시간, 주 5일) 제공 계획
 - 맞벌이 가구 중 소득하위 50%이하 0세 아동 양육 1천 가구 대상
 - ※ 지자체에서 가정보육교사(경기), 셋째아 가정양육도우미(대전) 제도 도입
 - ※ 경기도 가정보육교사 제도는 보육교사 자격소지자를 부모와 연계하여 지원

〈표 7〉 영아 정기 돌봄 지원 기준 및 이용 요금

유형	이용요금(1시간당)			'10년 지원 기준
	이용단가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115만원	69만원	46만원	보육료 지원 소득하위 50% 이하 (이용요금 60% 지원)
나형	115만원	57만5천원	57만5천원	맞벌이 가구 감경합산을 통해 50% 이하가 되는 가구 (이용요금 50% 지원)

- 저소득 중장년 여성이 자신의 양육경험을 활용하여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일자리 제공

- 신규 건립 문예회관 중 2개관에 육아시설을 설치
- 보육정보포탈시스템 구축
 - 「부모서비스 시스템」 구축으로 보육정보를 원스톱으로 통합 제공
 - 전자지도(Digital Map)를 활용하여 부모가 원하는 어린이집을 가장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는 검색 서비스 제공
 - 통합화된 정보 제공창구를 통해 어린이집 홍보서비스 제공
 - 지자체 및 중앙정부의 보육정책 및 다양한 보육서비스 내용에 대한 정보제공

나. 문제점

- 다양한 시간유형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나 공급은 부족한 상황
 - 시간연장형 보육교사는 6,000명(2010년)을 지원하고, 보육시설은 3,910개소(2008년), 보육 아동 수는 16,300여명 수준임.
- 보육시설에서 다문화 아동의 인지, 정서, 사회성 등 발달 지원 및 부모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미흡
 -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 아동, 부모 및 일반아동 대상 프로그램 개발, 보급
- 전염성 질병 및 사고 등의 경우에 대한 긴급보육지원 체계가 부족하여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갑작스런 전염성 질병 및 사고 등에 대한 대응이 어렵고, 예방접종을 위한 적시 병원방문도 어려움
- 가정내 보육은 제도화되어 있지 않고, 정부와 비영리, 영리 부분에서 분절적으로 보육지원이 실시되고 있으며, 현실의 다양한 영유아 보육 상황에 따른 보육욕구가 미충족인 상태
 - 질병·출산·사고에 따른 일시보육, 자녀 양육욕구(“내 아이는 내가”), 기업 근로환경의 다양화, 한시적 장애·치료 중 보육, 소규모 가정보육(5인 미만) 요구 등
 - ※ 베이비시터 관련 회사: 약 100여개(직업소개 등)
- 보육정보 포털 시스템 구축 미흡
 - 중앙과 지방의 보육정보센터의 연계가 부족하여 정보 DB 구축에 중복투자가 있고, 투자 대비 효과도 불분명함.
 - 육아 관련 정보들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제공되고 있으나 중복되는 경우 많고, 제공기관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질 높은 육아 관련 정보에 접근성 저조

- 육아 관련 정보 채널들: 중앙 및 지방 보육정보센터, 여성부 위민네트, 행정자치부 OK 주민서비스센터 등
- ※ 영유아 부모의 육아 관련 정보 습득원은 친구 32.1% 인터넷 사이트 29.1%, 집안 어른 24.8%로 파악(육아정책연구소, '09년 보육실태조사)

다. 향후 추진 방안

- ① 시설 미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가정내보육 서비스
 - 아이돌보미 등 찾아가는 가정내 돌봄 서비스 제공 확대, 강화
 - 영아(0~2세)를 둔 취업모를 위해 가정으로 일정시간 교육을 이수한 돌보미 파견 및 일부비용 지원 (1.2천명, 월 57~69만원) ('10 복지부 업무 보고)
 - 보육료 지원 소득하위 70% 이하, 영아(0세~만2세)를 양육하는 맞벌이·한부모 가정에 정기 돌봄 서비스(하루 최대 11시간, 주 5일)제공
 - 영유아의 환경에 적합한 아동의 가정에서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자는 최소한의 교육을 받은 일반인을 기준으로 하며, 서비스 제공기관 관리를 통한 제도 운영
 - 서비스 제공자 자격수준 확보를 위한 건강관리, 양성(교육) 기준 마련
 - 가정보육제도 이용자의 재정 지원은 양육수당 제도 도입 및 재정여건에 따라 장기적으로 추진
- ② 시간제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
 - 기존 시간제 아이돌보미 사업은 파견지역 확대로 이용의 편이성 강화 및 지원 대상 확대
 - 양육자의 출장·야근·질병 등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가족의 양육부담 경감
 - 아이돌보미 파견지역 및 수혜아동 : 232개 지역 7만명(09)
 - ※ '09년 아이돌보미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87.5점)는 높은 편으로 향후에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아이가 천식, 비염, 아토피 등의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교육을 받은 아이돌보미를 파견함으로써 보육의 질을 향상시킴.

③ 시간 연장형 보육서비스 지원확대

-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확대 계획
 - 시간연장 보육을 위한 보육교사를 증원하여 인건비 80%(민간 보육시설의 경우 '09년 1명 → '10년 2명, 총 월 100만원)지원
 - 향후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점진적 지원 확대
 - ※ 07.4천명→08.5천명→09.5천명(361억원) →10.6천명(408억원)지원
-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이 지역별로 균형 지정되도록 하고 거점형 시간연장 보육시설 운영 등 인근 보육시설과 연계 방안 추진
-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에 대해서도 시간 연장 보육서비스 제공
 - 종일반 운영의 단계적 확대
 - '10년(96%)⇒'11년(97%)⇒'12년(98%)⇒'13년(99%)⇒'14년(100%)
 - 종일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환경개선비 지원
 - 10년(200억원)⇒'11년(200억원)⇒'12년(200억원)⇒'13년(200억원)⇒'14년(200억원)
 - 종일제 보조인력(3세대 하모니) 지원
 - '10년(5,500명,286억원)⇒'11년(5,800명)⇒'12년(6,100명)⇒'13년(6,400명)⇒'14(6,700명)
 - 종일제 야간 돌봄 전담유치원 운영
 - '10년(150개, 38억원)⇒'11년(165개)⇒'12년(180개)⇒'13년(195개)⇒'14년(210개)

④ 동네 품앗이 육아망 구축

- 공적, 민간기구의 돌봄서비스를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돌봄 형태 모색으로 양육 문제 해결의 유연성 도모
- 3개년 시범사업 추진 후 타당성 평가를 통해 전국 확대 검토 (08년 10개 지역~10년 30개 지역)
-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자원봉사자를 육아망 코치(Community Care-network Coach, CNC)로 양성
 - 온-오프라인상 품앗이를 희망하는 가정을 연결하고 관리
 - 예) 전업주부-맞벌이, 맞벌이-맞벌이, 할머니-맞벌이 가정 등 연계

⑤ 지역 밀착형 One Touch 육아지원체계 구축

- 보육시설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다양한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구축

- 영유아와 가족이 함께하는 육아정보-놀이공간 및 시간제 보육 등 실시
-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 확대

⑥ 육아지원 정보망 구축

□ 육아정보 포털 시스템 구축 완성

- 분산된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부모지원시스템을 통합한 육아정보 포털 시스템 구축
 - 정보의 총합 제공을 통한 접근성을 향상하고 콘텐츠의 통합관리 및 창출을 통한 품질의 제고
 -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 보육전자바우처 시스템, 평가인증시스템, 자격관리 시스템, 안전공제 시스템 등을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연계하여 원스톱 서비스 제공
- 결혼·임신·양육 종합정보 제공(신규)
 - 자녀 출생 및 육아에 필요한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
 - 구글어스 서비스를 활용하여 어린이집 검색서비스 제공
 - 통합화된 정보제공 창구를 통하여 어린이집 홍보서비스 제공

6) 초등학생 방과후 교육 등 지원

가. 추진 현황

□ 사교육비 경감 대책 추진

- ‘2008 사교육비 조사 결과 분석 및 대책’ 발표(‘09.2.27)
- ‘공교육 경쟁력 향상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 발표(‘09.6.3) 및 ‘사교육비 경감대책 추진 로드맵’ 수립·추진(‘09.6.30)
 - ※ 경감대책 세부 추진계획의 월별(교과부), 분기별(시도교육청) 추진실적 점검
- 총리주재 민·관협의회 안전상정 및 논의사항 검토(‘09년 2회)
- ‘10년부터 시·도별로 사교육비 규모를 발표할 수 있도록 통계 인프라 강화
 - ※ 표본확대 규모 : 273개교 55,000여명(‘08년) → 1,012개교 약 74,000여명(‘09년)
- ‘09년 전국 457개 「사교육 없는 학교」 지원대상 학교 선정, 총 600억원 지원
 - ※ 초등학교 160개교, 중학교 142개교, 고등학교 155개교(학교당 평균 1.3억)

- 초등 돌봄 서비스 운영 확대
 - 방과후학교 초등 보육 교실의 기능을 강화하여 맞벌이·저소득층 가정 자녀의 건강한 성장, 학력 향상 지원 및 사교육비 경감, 교육 복지 실현
 - 학교에서 방과후 초등학생에게 돌봄 및 교육 서비스를 지원하여 학부모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
 - 초등학생 부모 47.2%가 방과후 학교에서 자녀보호 희망('07 시·도교육청 설문결과)
 - 2009년도 현황
 - 초등보육교실과 종일돌봄교실을 초등돌봄교실로 통합하여 운영('09)
 - 초등 보육 교실이 이미 개설되어 있거나 신규 개설을 희망하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추진
 - '08년 전국 3,334개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보육 실시, '09년 3,631개 초등학교에서 4,172개 방과후 교실 운영 지원
 - ※ 2009년 현재 국공립초등학교 총 5,754개교
 - 방과후학교 지원센터를 통한 지역사회와의 연계강화('09)
 -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민간참여 활성화 지원('09)
 - 전체 학교의 99.9%, 전체 학생의 59.5%가 방과후학교 참여('09.10월 기준)
 - ※ 방과후학교의 효과에 대한 설문 결과('09. 10월),
 - * 소질계발 및 실력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학생 65.1%, 학부모 61.8%
 - * 사교육비 감소에 대해 학생 58.3%, 학부모 60.2%가 긍정
 - 전체 농산어촌 140개 지역에 방과후 학교 운영비를 전액 지원
 - 2010년 계획
 - 유휴교실이 있고, 돌봄 수요가 있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신규 교실 설치
 - 2010년 전국 2,000개 교실에 실당 리모델링비 2,000만원 지원 계획
 -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방과후 돌봄 및 숙제지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학부모 귀가시까지 학교에서 돌봄 기능 지원
- 저소득층 자유 수강권 지원 확대
 -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속적·효율적 지원을 통하여 교육기회 확대 및 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하고 저소득층 학생의 방과후학교 참여 확대
 -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이 수강료 부담 없이 방과후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1인당 연간 30만원 내외의 자유수강권 지원

- 2009년도 현황
 - 공·사립학교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시·도교육청)
 - ('08) 32만명, 1,146억원 → ('09) 35만명, 1,265억원
 - 국립학교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교과부)
 - 국립학교 자유수강권 만족도 조사 실시('09. 7.)
- 2010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소년소녀가장, 시설수용학생, 보훈대상자 자녀, 다문화가정 자녀 등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
- 지역아동센터의 내실화
 - 빈곤지역과 농산어촌 중심의 '공부방' 활동으로 시작된 지역아동센터는 2004년 법제화됨에 따라 정부지원을 받는 공공적 성격을 갖는 기관으로 위상을 갖추게 되었음.
 - 지역아동센터 ('04) 895 개소 → ('05) 1,709개소 → ('06) 3,224개소
 - 지역아동센터가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충실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환경 개선, 프로그램 질 관리, 양질의 교사 확충이 시급
- 방과후 학교 운영의 내실화
 - 방과후 학교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기존의 방과후 교육 활동과의 차별화를 통해 내실화를 추구하고 있음
 - 운영주체는 학교장 중심에서 대학, 비영리법인(단체)등으로 운영주체의 개방성 확대
 - 지도강사는 현직 교원 중심에서 전문가, 학원 강사, 지역사회인사 등으로 다양화
 - 교육대상은 본교 재학생 위주에서 타교학생이나 지역사회 성인까지 점진적으로 확대
 - 교육 장소는 본교 시설 위주에서 인근 학교 및 지역 사회의 다양한 시설로 활용 극대화
 - 공급자 중심의 프로그램에서 수요자인 학생 개개인의 선택권을 최대로 보장하는 프로그램으로 강화
- 사이버 가정 학습의 내실화
 - 학교교육과 연계한 수준별 학습용 콘텐츠를 제공하여 보충학습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격차 해소
 - 사이버가정학습 시범운영: 대구, 광주, 경북('04)

- 사이버가정학습 전국 확대('05)
- 중1~중3에서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대상 확대('06)를 하고 주요교과(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수준별 콘텐츠 및 비교과 콘텐츠 제공
-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으로 사교육비가 연간 11,800억원이 경감되었다고 추정되며, 사이버가정학습 서비스 일일평균 이용률은 62% 증가, 중점서비스대상 학생의 64%가 배정형(담임형)으로 가입함.
- 2009년 현황
 - 차세대 사이버가정학습 시스템 학습관리시스템(LMS/LCMS) 구축
 - 사이버가정학습 수준별(기본,보충,심화) 콘텐츠 개발
 - 사이버가정학습 중앙센터(KERIS) 운영
 - 가입자수 1% 증가: 3,089,303명('08.8) → 3,119,924명 ('09.8)
 - 1일 평균접속자 수 19% 증가: 304,236명('08.8) → 362,313명('09.8)
- 2010년 계획
 - 개정교육과정에 맞춰 개발한 콘텐츠 서비스 및 차세대 학습관리시스템(LMS/LCMS) 본격 운영
 - '2007년 개정교육과정'의 연차적 적용에 따라 2011년도 적용 18교과의 수준별(기본, 이해, 심화) 학습용 콘텐츠 개발
 - 사이버가정학습 중앙센터 운영: 사이버가정학습 추진(분과)협의회 운영 등을 통한 콘텐츠의 공동개발 등 추진

나. 문제점

- 초등학생 학부모의 58.42%가 방과후 학교에서 자녀를 보호해주기를 희망하나, 이용율은 42.0%로 수요에 비하여 요구 충족 미비
- 방과후 학교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미흡
 - 저소득층 학생의 자율적 의사에 의한 바우처 사용현황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므로 자유수강권 활용을 강제할 수 없으며, 참여율 예측에 한계가 있음.
 - 맞벌이 가정 등 증가하는 사회적 수요에 비하여 초등 보육교실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 의지가 요구됨.
- 전반적으로 방과후 프로그램은 여러 기관에서 분산되어 실시되고 있어서 분산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종합·조정하는 방안의 제도화가 필요함.

- 보건복지부(방과후 보육,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공부방), 교육인적자원부(방과후 교실, 방과후 학교) 등
- 현행 방과후 학교는 지역 및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학생 개인의 선택권 및 교육 욕구를 충실히 충족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됨.
- 지역아동센터가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충실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환경 개선, 프로그램 질 관리, 양질의 교사 확충이 시급한 상황임.

다. 향후 추진 방안

① 초등 「종일돌봄교실」운영 확대

- 학교가 부모를 대신하여 '정규수업 + 방과후 활동 +가정돌봄'을 야간(21시)까지 지원하는 초등 종일돌봄교실 운영
 - 2012년까지 전국 모든 학교에 설치·운영 목표(유휴교실, 보육수요가 없는 학교 제외)
 - 초등 보육 교실이 이미 개설되어 있거나 신규 개설을 희망하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추진
- 종일 돌봄교실 운영에 「엄마품 멘토링제」 도입
 - 학부모를 교사로 활용하여 자녀 보육에 대한 신뢰감 및 친밀감 강화
 - ‘품앗이 보육’ 형태로 지역사회 인적 네트워크 활용 강화
 - 전업 주부에 대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 멘토 학부모가 엄마처럼 방과후보육·학습 지원
 - 멘토 1명당 3~5명의 멘티 초등학생에 숙제·독서지도 등 맞춤 돌봄 제공
 - 전국 2,400명의 멘토 활동(‘09)

② 맞춤형 방과후 학교 운영

- 계층, 능력,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
 - Total edu-care형 학교 운영
 - 영재 발굴·소질 개발형 거점학교
 - 대학과 연계한 팩키지 멘토형 학교
- 수요자가 원하는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 개발·지원·선택권 확보
- 교육 내용과 방식에 대한 지역별 운영 단체의 자율권 부여

③ 방과후 문화예술교육 지원 확대

- 농산어촌 및 교육복지투자 우선학교 대상 방과후 문화예술교육 지원
 - ('09) 서울경기 등 대도시 400개교 → ('10) 전국 1,000개교 이상
 - '12년까지 전체 초등학생의 55%(232만명)까지 문화예술교육 확대 실시
 - 유아 문화예술교육시설도 '09) 114개소 → '12) 1,000개소로 확대

④ 지역아동센터의 내실화

- 저소득 아동을 위한 다양한 방과후 보육을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복지 시설과 연계해 방과후 문화예술교육 실시
 - 청소년수련시설, 문화의 집 등 전국 300여개 시설을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 교육실시
 - 아동복지센터에 대한 예산지원 강화 및 학습지도교사의 보강
 - 아동에 대한 단계별, 맞춤형 학습지원 강화

⑤ 방과후 학교운영의 내실화

- 방과후 학교 운영의 개방성 확대를 통한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
 - 교원, 외부 강사, 자원봉사자 등 지역사회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
 - 지방자치단체, 기업, 대학 등 지역 사회 기관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여 패키지 멘토형 학교 활성화

⑥ 사이버 가정학습 내실화

- 학원 과외 등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도록 이-러닝(e-learning)을 통한 보충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지역간·계층간 교육격차 해소
- 중장기적으로 e-러닝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공교육 보완 기능 강화
- 사이버가정학습 중앙센터 운영: 16개 시도교육청의 사이버가정학습 안내 및 정보공유
- 사이버 가정학습 운영 지원: 사이버가정학습 추진(분과)협의회 운영 등을 통한 콘텐츠의 공동개발 등 추진
- 사이버가정학습 홍보 및 활성화: 웹포털, 라디오 광고 등을 통한 사이버가정학습 인식 제고
- 사이버가정학습 관련 연구: 사이버가정학습 효과성 조사 분석을 통한 개선 방안 마련

- 우수 수업동영상 서비스 운영: 우수 수업동영상 서비스를 통한 교수방법 및 교육의 질 제고

⑦ 방과후 학교 바우처 지원 확대

- 방과후 학교 이용료를 부담하기 곤란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바우처(자유수강권)를 지급하여 교육기회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지원
- 바우처 지원대상 학생 수를 2012년 49만명까지 확대
 - 35만명(09)→39만명(10)→49만명(12)
 - 지급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소년소녀가장, 새터민 자녀, 보훈대상자 자녀, 시설 수용 학생 및 기타 학교에서 지원 필요성을 인정하는 학생(차상위 계층 등)
 - 향후 목표: ('10)39만명→('11)42만명→('12)49만명→('13)52만명→('14)56만명→('15)60만명
 - 농·산·어촌 지역은 바우처 위주의 운영만으로 자립이 어려우므로 별도 지원 추진

7) 가족지역네트워크 구축 및 가족친화지역환경 조성

가. 현황 및 문제점

- 가족친화적인 지역사회환경 조성은 1차 기본계획에도 명시되어 있는 영역이나, 추진계획에 나타난 사업내용에 구체성이 다소 결여되어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아동 및 노인돌봄지원체계의 기본설계는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배려
 - 따라서 대다수 가족들은 유급의 돌봄 지원서비스를 이용하지만, 만족도는 낮음
- 과거에는 가족돌봄의 문제는 친족 및 지역공동체내의 다양한 품앗이와 자조망이 효과적으로 작용하였으나 현대사회로 오면서 친족 및 이웃끼리의 자조망 기능이 크게 상실
 - 뿐만 아니라 도시화로 인한 지역의 익명성은 지역사회의 안전성마저도 크게 약화 시킴
 - 이에 가족기능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자조망 구축 및 다양한 지원체계구축 필요

요성이 대두

- 따라서 가족의 다양한 욕구가 지역사회에서 충족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돌봄 인프라의 구비와 함께 다양한 돌봄 자조망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
- 거주지가 단순한 잠자는 곳으로만 한정되기 보다는 다양한 가족의 욕구에 부합하는 지역환경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다양한 세대와 성별의 참여를 격려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과 자부심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근자에 빈번하게 발생한 여아 및 여성 성폭력 같은 사건예방을 위해 지역환경 개선 사업과도 긴밀히 연동될 수 있음.
-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가정 양립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등의 인식개선이 미비하여 맞벌이부부의 검진서비스를 위한 제도는 더디게 변화되고 있는 실정(예로, 태아검진휴가제가 아직 도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이에 따라, 여성근로자들이 근무일에 임신·출산·자녀양육 관련 검진서비스 등을 받은 것이 곤란하며, 휴일에는 대부분 공공 및 민간 의료기관이 휴진하여 검진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상황. 이로 인하여 근로여성 및 그 자녀의 건강 등에 문제 발생 우려

나. 향후 정책 방향

- 지역별 가족돌봄 네트워크(혹은 가족지역연대) 결성
 - 가족친화적인 지역만들기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이나 동네 상점, 단체 등에 OO도, 혹은 △△구 “가족지역연대” 혹은 “지역과 가족의 네트워크” “지역의 가족돌봄 네트워크”라는 마크를 부여함으로써 자치구별로 다양한 가족친화네트워크 결성
 - 가족지역네트의 키워드나 목표, 비전 등은 각기 지역마다 상이할 수 있음.
 - 가족돌봄 네트워크 지방정부, 시민단체, 개인, 기업 등 참여자의 제한 없이 참여토록 하되, 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각 지자체의 현황과 성과를 행정안전부나 관련정책(예컨대, 건강가정기본계획에 의거한 가족정책)평가 부분에 반영하여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방안 마련
 - 혹은 관련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으로 시작하여 매년 우수 지역선발 경연대회

- 를 통해 긍정적, 물질적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보다 많은 지역사회의 참여를 유도
- 지역 내 노인, 아동, 저소득 가족 돌봄을 위한 다양한 자조조직 및 협력 망을 구축하는 것이 본 사업의 핵심
 - 예컨대 지역내 돌봄지도만들기나 육아 품앗이 네트워크 등은 지역사회가 적극 발굴하여 홍보
 - 돌봄 네트워크에 참여한 지역단체나 개인상점 등을 적극 홍보하고 이들로 하여금 더욱 가족친화적인 활동, 운영에 참여할 것을 권고
 - OO단체, XX상점은 “육아에 편리한...”, “아이와 엄마에게 친절한...” 상점, 병원, 음식점 등으로 명칭하고 현판 제공
 - 지역주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홍보, 지역단체장들은 이들에게 지역마크나 현판을 제공(김혜영 외, 2009)
 - 예시) 상점이나 병원 등에 “우리 ***는 지역의 행복한 아이키우기를 지원합니다” 등의 포스터나 로고, 현판 등 제공
 - 지역별 가족친화환경조성 실태조사결과에 근거한 인센티브 도입
 - 현재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법에 의거 매 3년마다 가족친화환경실태조사를 시행
 - 현재 일차 시범으로 평가지표의 개발을 통한 일부 지역사례만을 평가
 - 향후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법의 실효성제고를 통해 230개 시군구에 관한 일괄평가체계를 구비하고, 그 결과를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기 좋은 환경, 혹은 노인과 여성이 안전한 지역환경 등 주제별로 지역환경실태평가 결과에 의거하여 우수지역을 선발
 - 해당 지역에 대한 포창이나 인증제 부여와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가족친화환경조성 우수사례의 노하우 공유와 지역의 자발적 참여 유도
 - 지역별 돌봄지도 제작 및 정보제공
 - 가족 돌봄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의 돌봄 관련 서비스의 지리적 구성과 이용의 특징(편리성, 접근성, 안전성 등)을 함께 수록
 - 지역사회의 돌봄에 관한 민간, 공공, 개인 서비스 등 일체의 이용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자료화하고 모든 지역주민에게 정보 제공
 - 아동을 강조하는 지역사회는 아동 돌봄 관련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
 - 노인이 필요로 하는 지역 사회 내 다양한 서비스정보(노인돌봄시설, 노인복

- 지회관, 노인친화상점 등)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
- 장애인의 휠체어 등의 접근이 가능한 도로와 상점, 화장실, 그리고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자립생활을 지원
- 민간 및 공공기관을 망라하여 해당 지원망을 수합한 돌봄 서비스 및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는 구청이나 시의 홈페이지에 등록
 - 포켓북으로 제작하여 동사무소 등에 비치하여 출생신고나 전출입, 혼인신고 등 관련 대상자에게 무료 배포
 - 돌봄 마을 지도 만들기는 아동돌봄, 노인돌봄, 장애인돌봄 등의 영역이 있으나 아동돌봄으로 시작하여 이후 다른 영역으로 점차 확대함.
 - 마을지도 만들기는 전국적으로 일정기간 실시하도록 유도한 뒤에 다음해 가정의 날 등을 기념하여 “2010마을지도 경연대회” 같은 행사를 개최
- 지역별 돌봄품앗이 활성화
 - 동이나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맞벌이 가구클럽, 외동이 자녀를 위한 또래친구모임, 자녀의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엄마들의 품앗이 등 다양한 돌봄자조망이 형성될 경우 핵가족의 기능을 보완할 수 있음.
 -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이웃사촌 한가족의 사업 등과 연계할 경우 자녀돌봄 및 양육 품앗이는 쉽게 활성화될 수 있음.
 - 건강센터의 주력사업인 가족봉사단과의 연계하여 지역사회 돌봄 품앗이 활동이 개별 가구의 욕구 충족뿐만 아니라 이웃과 지역사회의 돌봄 기능 강화로 연계
 - 품앗이 활동을 격려하고 유인하기 위해서 행안부, 서울시 등 각 시민자원봉사센터의 봉사마일리지를 통합, 개별 봉사점수를 합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통합 점수가 일정 수준 이상인 시민이나 가족에게 명예 마을 지킴이, 우수 가족봉사단 등 다양한 명칭으로 시상
- 맞벌이부부 휴일검진서비스 제공
 - 공공의료기관(보건소 등)에서 지역사회 내 맞벌이부부들을 대상으로 휴일에 검진서비스 제공 필요
 - 현대사회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있고, 여성의 직종이 전문직, 사무직 등으로 전환함에 따라 검진을 위한 시간 활용에 있어서 제약
 -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홍보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

○ 서비스 내용(예시)

풍진검사, 기형아검사, 모성검사, 임신성당뇨검사, 임산부 산전후 관리, 영양제 공급, 영유아 기초 예방접종사업, 유축기 대여 등

- 사례로 경기 성남시(직장여성 임산부의 날)와 김포시(직장 임신여성 건강의 날) 등 일부 기초지자체에서 토요일검진서비스 제공
- 맞벌이부부들의 일-가정 양립 제고와 함께 모성 및 영유아 보호 강화 기대

3 맺는 말

- 위에서 제시한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은 크게 완화되고, 보육 서비스는 다양해지며,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도 높아지는 등, 부모들이 자녀를 마음놓고 낳아 키울 수 있는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보육료·유아교육비 전액지원 등 지원 대상 확대,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대상 확대
- 영아 정기돌봄 확대, 종일제 유치원 및 야간돌봄유치원 확충, 초등학교 종일돌봄교실과 방과후바우처 확대 등
- 국공립보육시설·유치원 확충, 농산어촌 보육교육여건 개선 등 인프라 구축
- 육아지원기관 평가 제도 개선 및 재정지원 연계, 운영의 투명성 제고, 인력 전문성 강화, 이용시간 등 운영의 합리성 제고 등
- 지역별 가족돌봄 네트워크(혹은 가족지역연대) 결성, 지역별 돌봄 품앗이 등 가족친화적 지역사회환경 조성
- 정책방안과 아울러 보육정책의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 방안과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논의가 필요함.

2



보육체계 개선: 서울시 '서울형 어린이집'을 토대로

안 현 미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안현미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1 들어가는 말

-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낮은 국공립보육시설 수는 여전히 보육체계의 장벽임.
공공성이라 함은 재화와 서비스의 소비와 이용에 있어서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 그것의 생산과 공급을 사회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함. 가장 강력한 조정의 힘은 국가로부터 나옴(안현미·김종건·박지아, 2007)
보육 공공성 강화 방안은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보육재정 확충, 보육서비스 질 개선, 평가인증을 통한 보육서비스 규제 강화 등 다양하게 모색, 실시됨. 요약하면 다음 두 가지 방법, 즉 첫째, 정부의 관리와 규제를 강화하는 방법, 둘째, 소유와 운영의 분리를 통해 사립보육시설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방법임.
- 사립보육시설을 비영리법인으로 혹은 국공립보육시설로 전환하는 방식(매입)은 성과가 미비했고 국공립보육시설 신축은 보육시설 '과잉공급'이라는 이유로 진척을 시키지 못하고 있음. 다시 말해서 지배적인 민간보육시설 환경에서 기존 정책만으로 공공성 강화 문제를 해결하기엔 또 다른 보육체계 개선이 요구됨.
- 서울시 '서울형어린이집'은 지자체 단위에서 지원과 규제를 강화하는 방법이지만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을 국공립보육시설 서비스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특징적 요소가 포함된 '제3의 보육체계'임. 결국 서울형어린이집의 목적은 '사립보육시설의 준공영화'를 통한 보육서비스의 질 개선'에 있음.
- 물론 서울형어린이집을 평가하기엔 시기상으로 한계는 있지만, 2009년 보육서비스 수요자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이후 민간시설 부모와

가정시설 부모는 각각 72.9%와 65.0%가 서비스가 개선되었다고 평가하였음.
 이러한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한 긍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비판적 논의들을 재검토함으로써 발전적인 서울형어린이집 방향을 논의하고자 함.

2 서울형어린이집의 특징

- 서울형어린이집은 보육시설에 대한 정부지원 이외 시설유형별 보육서비스 차이를 줄이기 위한 서울시 지원 전략임.



〈그림 1〉 (중양)정부 보육지원과 서울형어린이집 지원 체계

- 서울형어린이집의 구체적인 보육서비스 질 개선 노력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포함함.
 - 첫째, 보육서비스의 접근성. 민간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보육비용 부담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보육서비스의 접근성 제한을 해결하고자 함. 3세 아동 52,000원, 4세 이상 아동은 66,000원, 방과 후 아동은 33,000원 지원하고 있음.
 - 둘째, 보육서비스 다양성.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보육유형을 제공함으로써 자녀가 있는 가구 특성에 따라 선택이 자유롭도록 지원 함.
 - 셋째, 보육 환경 안전성. 친환경적 급간식과 위생적 공급을 통한 안전한 먹거

리를 아동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단체급식을 장려하고 있으며, 40인 이상 보육시설의 경우 취사부 지원을 실시함. 그리고 시설안전을 위한 비상재해대비시설 기준에 대한 점검 또한 강화함.

- 넷째, 보육시설 운영 투명성. 민간보육시설 지원과 함께 투명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1인 1계좌 사용, 클린카드사용, 회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함으로써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함.
- 다섯째, 보육교사 전문성.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인건비 보장, 보육시설 유형간 정보 공유와 시설장 및 보육교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율장학제도화를 구축함.

〈표 1〉 서울형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목적

보육 서비스 질	보육서비스 접근성	보육서비스 다양성	보육 환경 안전성	보육시설 운영 투명성	보육교사 전문성
프로그램	· 보육료 인하 (3세 이상)	· 맞춤보육 프로그램	· 급간식 위생 · 시설안전 · 주치의제	· 1인 1계좌 · 클린카드, 회계관리시스템	· 보육교사 처우개선 · 자율장학제도

- 이러한 다섯가지 보육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서울형어린이집은 정부의 보육 체계 위에 국공립보육시설과 민간 및 가정 보육시설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자체만의 노력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음.

3 서울형어린이집 현황

- 서울시 보육시설은 2009년 12월말 현재 5,725개소이고 보육시설 이용 아동은 193,723명으로 83.9%의 정원 충족율을 보임.
- 전체 서울시 보육시설 중 국공립·법인 보육시설은 670개소(11.8%),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은 4,901개소(86.1%)-민간 2,497개소(43.8%), 가정 2,404개소(42.3%)
- 직장 및 부모협동 보육시설은 113개소(2.1%)로 절대적으로 민간 및 가정보육 시설이 다수를 차지함.
- 보육시설 정원 충족율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공립 시설이 91.8%인 반면, 가정 보육시설의 정원 충족율은 79.4%로 시설유형별 정원충족율의 차이를 보임.

〈표 2〉 서울시 보육시설 현황

(단위: 개소수, 명, %)

	계	국공립	법인	민간			부모 협동	직장	가정
				민간개인	법인외	계			
시설수	5,725	626	44	2,278	219	2,497	17	96	2,404
아동정원	230,888	53,755	2,752	115,244	11,228	126,472	533	6,348	41,028
아동현원	193,723	49,338	2,364	94,767	9,198	103,965	460	5,018	32,578
정원충족율	83.9	91.8	85.9	82.2	81.9	82.2	86.3	79.0	79.4

자료: 서울시 보육통계 (2009. 12월 기준)

- 서울형어린이집은 민간보육시설의 수준을 높여 공보육시설에 대한 부모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음.
- 서울형어린이집은 공인을 통과한 보육시설에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보육료를 낮추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음.
- 하지만, 민간 및 가정 보육시설의 공인율이 30%대에 머물고 있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보육에 대한 수요자의 기대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표 3〉 서울시 '서울형어린이집' 현황과 아동 이용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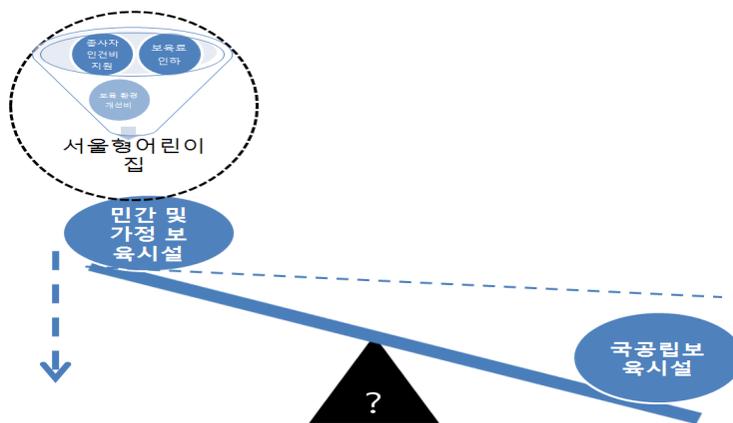
(단위: 개소, 명, %)

	계	국공립	법인	민간			부모협동	직장	가정
				민간개인	법인외	계			
시설	2,010	536	22	673	74	747	1	14	690
전체 시설 중 서울형 비율	35.1	85.6	50.0	29.5	33.8	29.9	5.9	14.6	28.7
보육아동 현원	9,725	45,347	1,813	34,006	4,372	38,378	28	1,133	10,525
전체 보육아동 중 서울형 이용율	50.2	91.9	76.7	35.9	47.5	36.9	6.1	22.6	32.3

자료: 서울시 보육통계 (2010. 3월 기준)

- 그렇다면 서울시의 2010년 성과목표인 서울시 보육시설 중 서울형어린이집 50% 달성 시점에서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한 논쟁들을 정리하고 서울형어린이집의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 보육서비스 공공성과 보육시설 소유권과 운영권 성격의 모호성
 - 지배적인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에 대한 중앙정부 혹은 지자체의 공적지원에 대해 타당성 논의가 제기됨. 이러한 논쟁은 기존 중앙정부의 기본보조금, 지급의 서울형어린이집 등과 같이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공적지원이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로 귀결될 수 있음.
 - 서울형어린이집의 목적은 ‘사립보육시설의 준공영화’를 통한 보육서비스의 질 개선’에 있음. 준공영화를 사영(私營)과 공영(公營)의 중간단계 또는 중간영역으로 본다면, 보육료 인하, 회계관리시스템 등의 정책은 공영화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볼 수 있지만 평균보육료(현원기준)의 10% 기타운영비 지원은 민간의 소유권과 운영권을 강화하는 것이므로 사영을 강화하는 방향의 정책임. 더욱이 2009년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민간개인과 가정보육시설의 건물 소유형태가 52.2%가 자가, 17.8% 전세, 24.2%가 월세임을 감안할 때 기타운영비의 일정부분은 운영보다는 개인 소유권을 보장하게 됨.
 - 이에 대한 논쟁 지점은 결국 사영(私營)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냐 공영화를 강화할 것이냐에 관한 것임.
 - 그래서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형어린이집이 표방하고 있는 민간 및 가정 보육시설의 서비스 수준을 국공립보육시설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는 무엇을 기준으로, 어느 수준까지 끌어올릴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그림 3> 서울형어린이집과 보육시설 유형간 균형 가능성?

□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 보육교사의 획일화된 인건비 상향조정과 보육교사간 형평성 문제

- 보육서비스 질 개선을 목적으로 한 보육교사 인건비 상향조정은 강도 높은 장시간노동 체계를 그대로 유지한 채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만의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은 제한적이라는 비판임(제갈현숙·김송이, 2010).

2009년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보육교사는 1일 평균 9.5시간을 일하고, 월평균 급여 및 기타수당에서 보육교사의 월 평균 급여는 약 126만원으로 나타남. 이는 보육교사의 평균 호봉인 4.2호봉, 평균 4년 경력인 경우를 전제하여 해석할 수 있음. ○ 그렇다면 일률적인 국공립보육교사 1호봉 수준의 상향조정은 획기적인 시책이지만 전체 보육교사 처우와 관련해서 볼 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

- 2009년 보육서비스 수요자 만족도 조사(서울시)에 따르면,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효과는 ‘시설 및 환경 개선’(42.2%), ‘보육료 부담 경감’(41.7%), ‘보육교사의 질 향상’(11.1%)으로 나타남.
- 결국 보육교사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은 국공립보육시설 보육교사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경력과 호봉 그리고 법정근로시간외 근로에 대한 수당지급 논의 등을 포함한 총체적 접근이 필요함.

□ 보육서비스 지원과 규제의 조화

- 서울형어린이집은 보육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지원 이외에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과 클린보육을 통해서 보육시설 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실시함.
 - 서울형어린이집은 공인과정을 거쳐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공인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년 안심보육모니터링단을 운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함.
 - 안심보육모니터링은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조력의 목적과 관리 목적 모두 포함 함. ‘09년 안심보육모니터링은 시설안전, 급식위생에 초점을 두었다면 ‘10년 안심보육모니터링은 안심보육을 넘어서 맞춤형보육, 클린보육, 보육인력전문성 등 공인기준에 준하여 지속적인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기준이 강화됨.

〈표 4〉 안심보육모니터링 관찰지표

구 분	2009년		2010년	
	항목	평가기준	항목	평가기준
안심보육	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식위생 관련 안전 및 청결 • 보육시설내외 및 설비안전 • 아동 인권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식위생 관련 안전 및 청결 • 보육시설내외 및 설비안전 • 아동 인권
맞춤보육	-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춤 보육 운영 계획의 실시 • 홍보 및 수요조사 실시 여부
클린보육	-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운영비 투명성 • 어린이집 정보 온라인 공개 • 부모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성화
보육인력 전문성	-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교사 자율장학 및 교육 참여

- 서울형어린이집이 보육서비스 질 개선을 통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시설’로 전환하고자 한다면 그 지향점은 국공립보육시설의 서비스 질 수준이 될 것임. 하지만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기준에 준거한 모니터링이 국공립보육시설 서비스 수준에 준하고 있는가는 추후 연구가 필요함.

공인기준에만 국한한다면 국공립보육서비스 수준을 결정짓는 보육프로그램에 대한 질은 간과한 채 국공립보육서비스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것은 한계가 있음.

- 서울형어린이집의 재정운영에 대한 규제는 클린보육, 즉 1인 1계좌 사용, 클린카드와 회계관리시스템 등을 통해서 이루어짐. 이는 보육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는데 긍정적임. 단, 회계관리시스템이 정착하는데 있어 시간을 필요로 하고 보육시설에서 직접(시설장) 관리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컨설팅이 요구됨.

서울형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서울형어린이집 목적	비판적 입장
보육료 지원(유아)	보육료의 부모부담 인하 효과	사립보육시설에 대한 공적 지원의 타당성 문제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국공립보육교사 수준의 인건비지원을 통한 보육교사 전문성 확충과 안정적 고용환경 조성	보육교사 경력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경력 높은 보육교사 사기 저하
회계관리시스템과 클린카드 사용	보육운영의 투명성	
맞춤보육	맞벌이 부부의 보육서비스 유형 다양화	보육포털서비스의 정보 공개 내용 미흡
안심보육모니터링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기준 유지(보육서비스의 지속성)	형식적 수준이 아닌 실질적인 보육서비스 질 평가 시스템이 필요

5 '제3의 보육체계'로서 '서울형어린이집'

한국 보육체계 위에 자치구 중심의 '서울형어린이집'이 보육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제시한 논쟁 지점들을 재검토함으로써 '제3의 보육체계'를 기대할 수 있음.

- 국공립보육시설 서비스 수준을 기준으로 하기 보다는 '서울형표준보육서비스' 개발이 필요함.
 - 아동의 연령과 발달에 적합한 보육과정 및 서비스 표준화를 토대로 표준보육서비스 개발하고 이를토대로 표준보육비용을 재산정하는 것이 요구됨. 결국 서울형어린이집은 이러한 '서울형표준보육서비스'를기준으로 보육서비스 질 개선 노력을 해야할 것임.
 - 기대효과 : 특별활동에 의한 추가 프로그램 혹은 특별활동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음.
보육료 부담 인하와 3세 이상 아동을 위한 적정 표준보육비용을 산정 함으로써 민간보육시설 운영비 보전 문제 해결
 - '서울형표준보육서비스'에 따른 보육시설별(보육시설 유형별, 규모별 고려) 지원체계 또한 고려되어야 함.
- 시설장 및 보육교사 전문성과 보육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근로조건 재검토
 - 동일노동을 수행하는 유치원교사 근로조건과 보육환경을 분석하고 이에 비례한 보육교사 처우 개선 요구. 특히 자기개발과 지식습득을 위한 근로시간 조정과 경력, 호봉에 기준에 인건비 책정이 요구됨.
 - 기대효과 : 안정적인 근로환경으로 인하여 보육서비스 질 개선
우수한 보육교사 확보
시간연장, 시간제 보육에 있어 질 높은 프로그램 실시 가능성 높아짐.
- 안심보육모니터링의 전문성 강화와 규제 강화
 - 주기적 평가실시를 통하여 보육시설의 자발적인 증장기적 개선 노력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M • E • M • O •

• M • E • M • O •

• M • E • M • O •

• M • E • M • O •